

‘12·29 여객기 참사 특위’ 특별법 제정 속도 낸다

국회서 첫 회의... 여야 15명 구성 위원장에 권영진... 지역 의원 4명 2차 가해 엄벌·희생자 추모사업도 국토위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6일 관련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특위는 여야 의원 15명으로 구성됐는데,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의원 4명이 포함됐다.

소위원회는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회’(소위원장 김은혜 간사)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이수진 간사)를 구성했다.

소위원 수는 각 7인으로 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진상규명 소위’에는 권향엽·문금주 의원이, ‘유가족 지원 소위’에는 전진숙·정준호 의원이 들어갔다.

권영진 위원장은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



권영진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1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스

음을 전하며, 향후 특별위원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희생자와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피해구제와 지원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듣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위원장은 “인터넷과 SNS(소셜미

디)에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악성댓글과 가짜뉴스 등 2차 가해 행위가 있다”며 “이런 행위에 엄벌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손명수 위원(민주당 의원)님이 제안해주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결의안이 가결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주 토요일 합동 추모식에 참석해 유가족을 뵙고(말씀을) 늘 경청하고 특위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여야 협력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하겠

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여야 의원님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숙 의원은 “유가족을 비롯해 긴급 재난 지원에 투입된 인력, 수많은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금주 의원은 “일부 온라인에서는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 주는 일들이 발생한다고 들었다”며 “더 이상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위는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에 참석해 피해자 가족 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또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토위는 결의안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일부 인터넷과 SNS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댓글과 허위 정보가 유포돼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악성 게시물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행위는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명예 훼손·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 행위 강력 경고 △정부·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 등을 주문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형배, 참사·재난 취재언론인 트라우마 치료 법안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 을·사진)은 16일 참사·재난 현장 취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받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현장 대응 업무인 ‘구조, 복구, 치료 등’에 ‘언론취재’도 포함해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명확히 했다.

민 의원은 “최근 항공참사 현장을 취재



하는 언론인들이 심리적 외상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언론인들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세월호, 이태원참사, 최근 항공 참사까지 언론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계원 “가자지구 467일만 휴전 합의 환영”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 을·사진)은 16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467일 만의 가자지구 내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 타결을 환영했다.

조 의원은 이날 환영 입장 발표와 함께 “가자지구의 민간인들이 평화를 누리고 신속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해 7월 16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중단과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전쟁의 참상 속에서 고통받아온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다”며 “가자지구의 평화 정착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농식품부, 설 성수품 할인에 700억 지원... 100억 추가

최근 여러 기관에서 발표한 설 상차림 비용이 지난해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가 성수품 등 할인 지원 규모를 100억원 추가해 700억원으로 늘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소비자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할인 지원 규모를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할인지원 대상 품목은 당초 28개 품목

에서 31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설 2주전(1월 16~22일)에는 배추, 돼지고기(앞다리) 등 기존 할인지원 품목(14품목)에 감귤, 만감류, 대파, 얼갈이, 열무, 도라지, 고사리, 봄동, 파프리카, 새송이버섯이 추가된다. 소비자들이 시기별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인하고 장을 보면 보다 저렴하게 상차림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김선욱 기자

여야, 오늘 ‘내란 특검법’ 합의 여부 ‘주목’

국힘,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민주 “협의 하되, 반드시 처리” 법안 입장차 커 합의 어려울 듯

여야가 17일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처리를 위한 협상을 시도하기로 하면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해 108명 이름 전원으로 당론 발의하기로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험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안을 발의했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악의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고 의원들께서 동의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안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 야당 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를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및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 5개 혐의로 축소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원 역시 ‘상설특검’ 규정을 따르면서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외의 사건 관련자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법원 행정처장과 법학교수회장 등 다수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거쳐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는 하되, 17일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간 끌기만큼은 안 된다고 강조

해왔는데도, 오늘 하겠다는 법안 발의를 ‘아마도 내일쯤’이라며 또 늦겠다”며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여야 의원 7명이 출국하는 일정을 고려해 본회의 표결 시점을 일주일 이상 늦추겠다는 꿈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법은 내란 선동죄와 외환죄도 제외하고, 압수수색 거부 추가, 수사 인력·기간도 줄이겠다”라며 “이쯤 되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우리 특검법은 ‘내부 결속용 면피성 특검법’이고 ‘내란 세력 보호법’이라고 고백하라”고 직격했다.

정치권에선 수사 범위와 대상, 인원수, 그리고 외환혐의 추가와 법안 명칭 등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권성동 원내대표와 만나 1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특검법 회담 중재와 본회의 개최 의사를 전했고, 권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輿, 피의자 윤 옹호 몰타기 중단해야”

“선거법 재판 종결, 사법부 간섭”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피의자 윤석열 옹호를 위한 몰타기를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처럼 진행되는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완행열차’처럼 진행되고 있다고 왜곡 주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법독위는 “권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관련 탄핵 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 서류 송달을 회피했다는 주장은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한 전

형적인 몰타기”라고 주장했다.

또 “권 비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은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충분한 심리도 없이 시한에 쫓겨 재판을 종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간섭”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위반 장기 미제 사건이 많은 이유는 충분한 심리를 위해서 일 텐데, 이 대표에 대한 사건만 3개월 안에 끝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힘을 이용해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